

IMF 체제 이전과 이후의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 비교

류정순(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손경애(서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서론

우리 나라 정부는 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사회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헌법27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기회 확대 노력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고등학교 취학율이 92.6%(통계청, 1997)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등교육의 취학 기회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비의 공부담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수익자 부담에 입각한 상품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과외 망국론'이 제기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서 1997년 연간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13조 4,928억원(한국소비자보호원, 1997)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인 67조 5,786억원(통계청, 1997)의 약 20%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 체제 아래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가적 재원이 사교육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순기능도 있으나 그 열기가 도를 넘어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고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의한 교육은 교육기회를 학부모의 지불

1) 초·중등교육의 경우 공교육비 공부담비율의 OECD 국가평균은 94.9%인 반면 한국은 78.9%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OECD 국가평균이 84.6%인데 비해 한국은 21.4%에 불과하다.

능력에 따라 분배되므로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윤건영, 최영순, 1998). 또한 학벌 위주의 한국사회 풍토에서 교육은 거의 유일한 열린 계층이동 통로인데,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의 격차는 바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뜻하므로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여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 일용직 노동자, 파출부, 영세사업자 등의 한계계층의 실업자들의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 사교육은 커녕 공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의 격차가 커져 가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황일청(1992, 172)은 가난한 사람들은 장래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소외계층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며 이들의 불만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갑자기 생활수준이 낮아진 신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비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한 톱니효과(ratchet effect)로 인하여 빈곤에 적용된 기존의 빈곤층보다 더 결핍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불만과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 IMF 사태 이후 이러한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의 경쟁 지향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심화 상태를 방치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유대의 끈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 동안 과외정책과 대학입시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선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접근해 왔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바뀌어질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1998년 들어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자연 감소되기 시작했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오석진, 1998).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1998; 오석진, 1998) IMF 이후 평균 가계소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에서는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통계청, 1998), 계층간의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질 소지가 크다.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경쟁의 결과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기회 불평등에 대해 수행되어 왔을 뿐(김성열, 1984; 석태중, 1987; 차윤경, 1983) 교육기회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사교육비의 총 규모를 산출하거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논의 수준에 그쳤다. 정부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절대적인 감소에 초점을 둔 단순차원의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대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심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규모의 산출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의 구조에 내재해 있는 사회계층간의 유기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사기간이 짧아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자료의 표본이 가지는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가구의 1년 365일 동안의 가계부 분석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에서 1997년과 1998년 1/4분기와 2/4분기의 한국 도시 근로자 학부모 가계의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별 격차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IMF라는 극단적 경제위기 상황 이전과 이후의 사회계층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원칙을 구가하는 민주주의 복지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불평등 내지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1) 한국 도시학부모 가계의 IMF 이전과 이후의 사교육비의 계층별 지출액수, 소비에 대한 비율, 한계지출성향, 소득탄력성 및 계층별 누적점유율은 어떠한가? 2) 한국 도시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문제를 학력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결과로 간주하고(이해영, 199) 사교육비 지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력경쟁은 학교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사회학적 관점과 학교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다.

1. 사회학적 접근방법

1) 기능주의론(Functionalism)

기능주의론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고도성장 정책이 성공했던 시기에 독일대학의 학문의 가치중립 개념을 적극 수용해서 파슨스(T. Parsons)를 중심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기능주의론은 50-60년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적응하는 기능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배우며, 사회질서 유지 및 사회성원의 욕구충족을 수단으로 한다. 이들은 학교교육의 주 기능을 사회화와 선발기능이라고 주장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학생의 성취성에 둔다(Parsons, 1959). 기능주의론자들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이혜영, 1997: 552).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력이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이 바로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능의 수준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보상이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경쟁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기 때문에 학력별 사회적 차별은 공평한 사회적 보상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기능주의론자들은 교육 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통하여 계층이동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2) 갈등론(Conflict Theory)

1970년대에 접어들자 서구 교육사회학계에는 마르크스의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갈등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학자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영향을 받아 70년대 서구의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현행 교육구조의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적 교육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변혁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arsons, 1959). Bowles, Gintis, Carnoy와 같은 갈등론자들은 학교교육이 지배집단의 사회질서를 재생산하여 사회불평등을 창출한다고 믿었다. 갈등론에서는 학교교육을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간주한다.

갈등론은 3단계에 걸쳐 발전되어 왔다. 갈등론의 제 1단계는 Bowles, Gintis, Carnoy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재생산론'으로, 이 이론에서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제가치, 규범과 기술 등을 아동에게 전수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 한다. 갈등론의 제 2단계는 Bernstein, Young에 의해 주창된 '문화적 재생산론'으로, 이 이론은 학교에서 수용하는 문화는 지배집단이 향유하는 것으로 그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합법화하며, 그들의 지위적 특권을 은밀히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주장한다. 갈등론의 제 3단계는 Apple, Wexler, Dale, Giroux 등에 의해 주창된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이다. 저항이론은 인간을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대해 거부·저항·갈등하는 능동적인 인간관을 견지한다. 따라서 학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기관으로 자본가의 노동경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현장이라는 것이다(Giroux, 1983: 260).

이들 갈등론들은 각기 논의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마르크스주의적 갈등이론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즉, 이들의 경향은 불평등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적 교육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변혁하자는데 공통적인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적인 불평등한 대우에서부터 회피하게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2. 경제학적 접근방법

1)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교육사회학의 기능주의론에 기초하여 교육경제학의 인간자본론이 대두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학교교육의 의미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간자본론은 Schultz(1961)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Becker(1964)와 Mincer(1962) 등의 시카고 학파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간자본론은 교육에 자유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인간자본론은 교육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얻는 과정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한다. Schultz의 이론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은 교육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증대는 결국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인간자본론적 관점에서 학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시키는 가장 전문화된 기관이다(Becker, 1964: 29).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 수입의 차이나 직업지위의 차이는 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 즉, 생산기술의 양적·질적 차이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기인한다(Mincer, 1962; Flanagan, 197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2) 노동시장 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노동시장 분절론은 고전파 경제학자 Mill과 Dobb, Dunlop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왔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노동시장은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분절론자들은 노동시장의 분단구조가 교육의 수준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은 인간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은 개인의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가 비슷한 사람에 대해서도 회수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학교교육을 불평등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선별장치로 간주한다(Cain, 1976: 1215-1221). 즉, 학교교육은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태도나 인성을 개발시키고,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차를 강화하는데 이용된다고 본다(정우현, 1991: 429). 노동시장 분절론에서는 학력경쟁을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인되는 구조적인 교육문제로 취급한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본다. 노동시장 분절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일차시장(Primary Market)과 이차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뉘어진다. 일차시장은 임금이 높고 승진이 다양하며,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 이차시장은 낮은 임금, 나쁜 직업조건, 그리고 승진의 기회가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이직률이 높은 시장을 의미한다(Reich, Gordon, & Edwards, 1973, 319-360). 개인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소속되는가는 개인의 교육수준이나 인지적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개인이 특정한 노동시장에 속하게 되면 두 노동시장 간에는 두 노동시장간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정우현, 1991: 123). 따라서, 개인은 고용주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하여 1차시장에 입문함으로써 채용, 임금, 승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력경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능주의론과 갈등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인적자본론과 노동시장 분절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 이론들을 각기 학력경쟁의 동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주의론적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되는 반면,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즉, 인적자본론적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높은 소득을 보장받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되고, 노동시장 분절론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혜택을 얻기 위하여 학력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인적자본론에 근거하여 대학학력과

명문대학 학력을 선호하게 된다. 노동시장 분절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계속적으로 학교교육이 값싼 노동력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이론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주안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점을 지니게 된다. 기능주의론과 인간자본론에서는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인간자원의 활용 및 체제유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갈등론과 노동시장 분절론에서는 학교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한 교육체제 구조를 변혁하자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들 이론들 간의 학교교육에 대한 상이한 시각들은 학력경쟁은 교육의 효율성과 평등성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기능주의론과 인적자본론은 학력경쟁의 원인을 개인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고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지식이나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김영용, 전용덕, 1993).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획득된 학력 자체를 생산성 증가의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 높은 학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게 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훈련경비가 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고학력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이 대학학력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인식과 대졸자를 선호하는 고용시장 관행이 지속되는 한 개인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극심한 학력경쟁 벌이게 될 것이다.

Ⅲ.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교육기회의 분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기회 불평등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사교육비의 규모, 과외비율, 과외비용,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미국의 Coleman 보고서(Coleman et al., 1966) 이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Coleman 보고서는 학업성취는 학교시설이라는 투입요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가정배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형식적 의미의 교육기회 평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취학 전에 지니는 불평등은 감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의 출신배경이 학업성취 불평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Coleman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1972

년 Jencks 등(Jencks, et al., 1972)에 의해 입증되었다. Jencks 등은 지능검사와 학력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록 지적성취수준의 평등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업적 지위나 수입 등 사회·경제적 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Coleman의 보고서와 Jencks의 연구 이후 1970년 중반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차경수(1973)는 우리 나라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교육기회 접근형, 2) 성적 모형, 3) 봉사모형, 4) 결과모형 등 4가지의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교육기회의 개념을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확대하여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와(이주현, 1981; 김미주, 1985). 그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사회계층과의 관계속에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신일, 1981: 108-124; 김영모, 1973; 임희섭, 1983: 82-168). 이규환(1985: 19-50)은 빈민계층과 근로자 계층의 교육기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수행한 결과, 빈민층 출신 학생들이 학교성적은 우수하여도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들로부터 무관심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임선희(1984)는 근로계층의 교육기회와 사회이동과의 관계성을 연구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교 진학기회와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등학교 진학기회에 대한 연구는 진학결과로 살펴본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장진화(1992)의 연구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불평등화 해소에 미친 영향을 Lorenz 곡선에 의해 분석한 차재명(1981)의 연구가 있다. 고등교육 진학기회 연구물로는 고등교육기회가 소득계층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성열(1984)의 연구와 대학진학 기회획득의 결정요인을 귀속요인과 성취적 요인의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 차윤경(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석태종(1987)은 우리 나라 개회기인 1010-1938년까지 학교교육기회에 미치는 신분배경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신분, 성별, 그리고 출신지역에 따라 교육기회가 전반적으로 개방되고 증대되었으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장진화(1992)의 연구에 그칠 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사교육비 지출

(1) 사교육비의 규모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절대적 지출규모는 조사시기와 대상, 사교육비의 개념 정의,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공은배, 백성준, 1994)이 추산한 1990년부터 1997년

까지의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추이를 보면, 1990년 3조 750억원이었던 과외수업비가 1994년에는 5조 8,447억원으로 4년동안 90%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외비는 1995년에는 9조 3,200억원이고(박정수, 1996:), 1997년에는 13조 4,928억원으로(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2년동안 45%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사교육비의 상대적 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사교육비 총액을 GNP에 대한 총교육비, 총교육비에 대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추계한 '97년도 우리 나라 국민총생산(GNP)은 428조 9,771억원이다. 97년도 정부예산은 67조 5,786억원이며, 이 중 교육부 예산은 18조 3,066억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이 추산한 13조 4,928억원의 1997년 연간 총과외비는 GNP의 3.1%, 정부예산의 20.0%, 교육부 예산의 73.7%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우리 나라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총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68.5%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는 학부모의 경제력 또는 지불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비지출 항목별 교육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중고교생이 가계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액의 24.5%를 차지하여 다른 어떤 항목들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가구도 전체 가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1997).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중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의 비중은 전체 소득의 9.4%, 고소득층의 7.4%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는 늘어나지만 그 비중은 낮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저소득층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과외비율

1990년 이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의 60%-90% 정도가 과외경험을 하였고(정영숙, 1996: 1-13; 오석진, 1998; 유형선, 1998; 손경애, 1992), 중·고생들의 40-50%가 조사 당시 현재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정일 외, 1997; 손경애, 1992). 이러한 과외비율은 IMF 체제 이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8)의 '과외실태 조사결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과외를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38.4%로 97년의 53.1%보다 14.7% 포인트 감소했다. 그리고 그 동안 과외를 받던 학생 중 33.7%가 을 들어 과외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오석진

(1998)의 '고교생의 과외실태 조사분석 연구'에서 보면, 청주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15.7%가 현재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이전의 일반시 지역의 중등학생들의 과외비율의 44.0%(윤정일 외, 1997)보다 현격하게 낮은 비율로 사교육의 열기가 IMF 한파의 영향으로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과외비용

1998년 1.4분기 들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다(통계청, 1998). 통계청의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 수지동향에 따르면, 명목 소득을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10.8%가 줄어 이후 17년 9개월만에 최대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IMF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는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무려 -16.3%를 기록하는 사상 최고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1.4분기 교육비도 6.8% 감소함으로써 명목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현상은 교육비 지출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월 평균 과외비는 적게는 11만원 선부터(한국소비자보호원(1997), 통계청은 30만원 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영숙, 1996: 1-13; 윤정일 외, 1997; 김욱, 1995; 손경애, 1992). 이러한 월 평균 과외비용의 차이는 조사지역 단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최근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한달 평균 과외비용은 고교생의 경우 22만 1천 원으로 97년 29만 5천원보다 25.1%포인트 줄어들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8). 과외를 받는 학생의 가계비 대비 과외비의 비율은 전국평균이 16.5%이며(윤정일 외, 1997), 서울의 경우 월 평균 과외비용은 315,000원으로 이는 서울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3.7%에 해당된다(손경애, 1992).

3)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사교육비 지출은 지역, 소득수준, 어머니 학력, 자녀의 학교성적 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보면, 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일희, 1980; 손경애, 1992; 양세정, 이윤금, 1997: 81-101; 이종호, 1990; 정영숙, 1992: 1-14; 주영량, 1992;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즉,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계층별 가구당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늘어나지만 그 비중은 낮아진다(소비자보호원, 1997). 자산도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아지고 있다(임정빈 외, 1995: 301-313; 김성희, 문숙재,

1996; 김은정, 1995).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업계층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정영숙, 1992: 1-14). 즉, 아버지(김용재, 1992; 주영량, 1992; 오석진, 1998)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손경애, 1992; 양세정, 이윤급, 1997: 81-101; 오석진,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직,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인 경우 비교적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일희, 1980; 최승애, 1985; 유형선, 1998; 이종호, 1990; Espenshade, 1984). 류정순, 이희자(1995:)는 우리 나라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소득에 대한 교육비 비율, 소득탄력성 등의 모든 지표가 교육비의 증가현상과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의 심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91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지며, 이는 곧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의 심화추세를 나타내며 곧 다음 세대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유형선, 1998; 조우현, 1992).

그리고 주부의 취업유무와 사교육비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취업주부 가계보다 비취업 주부 가계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정영숙, 1992: 1-14). 자녀의 성별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의 자녀일 경우 여자 자녀보다 월등히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연구도 있는가 하면(김일희, 1980; 김옥, 1995),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김용재, 1990;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Ⅲ.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사교육비를 학교 밖에서 사부담으로 행해지는 교육비용으로 정의하고 입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기타예능계학원, 태권도학원, 기타체육계학원, 사무·전산학원, 독서실 및 독서실이용료와 기타보충교육비 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1997년과 1998년 상반기의 사교육비의 지출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가계 사교육비의 지출의 계층에 따른 격차와 불평등의 정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후 향후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복지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은 1997년과 1998년 상반기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해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1년 365일 동안 계속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대상 가계의일반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방법은 계층별 월평균 사교육비, 계층별 월평균 소비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 계층별 사교육비의 한계지출성향, 계층별 사교육비의 소득탄력성, 계층별 사교육비의 누적점유률의 '97년 상반기와 '98년 하반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하고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해 추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ul Range Test를 실시하며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각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Ordinary Lease Square) 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변수들은 자료에서 사용 가능한 11개 변수들 가운데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과 유의한 영향력이 예측되는 변수들을 골라서 분산분석한 후 선정하였다. 이 분석에 앞서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0.4 이하인 변수들을 택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 Durbin-Watson 값으로 오차항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고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식 (1)과 같다.

$$E_i = a + b_1C_i + b_2NC_i + b_3NWi + b_4HA_i + b_5HS_i + b_6HJ_i + b_7QT_i + b_8AR_i + b_9SI_i + u \tag{1}$$

식(1)은 학부모 가계 즉, 사교육비의 값이 0보다 큰 가계를 표본으로 하며 E_i 는 i 번째 소비자의 월평균 사교육비이며 a 는 상수, b_1 에서 b_9 는 알려지지 않은 회귀계수, C 는 소비, NC 는 자녀수, NW 는 취업자수, HA 는 가구주연령, HS 는 가구주성별, HJ 는 가구주직업, SI 는 배우자 취업 유무, AR 은 거주지역²⁾ 그리고 u 는 오차이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소비, 취업자수, 자녀수, 가구주 나이는 연속변수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명목변수로서 <표2>에 제시했다.

[표 2]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명목변수들

변수명	기준변수	가변수
AR(지역)	서울	AR1은 서울이외 지역
QT(분기)	1/4분기	QT1은 2/4분기
HS(가구주 성별)	남	HS1은 여
HJ(가구주 직업)	전문직	HJ1은 기술공/준전문직 HJ2는 사무직 HJ3는 서비스.판매직 HJ4는 농어업/기능직 HJ5는 단순노무직
SI(배우자 취업여부)	취업	SI1은 비취업

2) 통계청에서는 서울과 그외 지역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분류가 불가능하다.

[표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성격

변수	집단	97년		98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구주연령	60세이상	340	4.9	270	3.9
	50세 이상 - 60세 미만	880	12.8	825	11.9
	40세 이상 - 50세 미만	2285	33.2	2272	32.9
	30세 이상 - 40세 미만	2713	39.5	2893	41.9
	30세 미만	658	9.6	644	9.3
가구주성별	남	5807	84.5	6010	87.1
	여	1069	15.5	894	12.9
가구주직업	전문직	1227	17.8	1425	20.6
	기술공/준전문직	771	11.2	780	11.3
	사무직	712	10.4	732	10.6
	서비스판매직	1150	16.7	1140	16.5
	농어업/기능직			2369	34.3
	단순노무직			458	6.6
가구주학력	17년 이상	241	3.5	176	2.5
	15년 이상 - 16년 이하	1357	19.7	1967	28.5
	13년 이상 - 14년 이하	469	6.8	1803	26.1
	10년 이상 - 12년 이하	3042	44.2	1502	21.8
	9년 이하	1767	25.7	1456	21.1
주거형태	자가	2186	32.8	3528	52.9
	전세	956	14.3	2186	32.8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956	14.3
총소비	1,706,931원 이상	1975	28.7	1726	25.0
	1,218,568원 이상 1,706,931원 미만	1865	27.1	1726	25.0
	872,805원 이상 1,218,568원 미만	1713	24.9	1726	25.0
	872,805원 미만	1323	19.2	1726	25.0
지역	서울	1441	21.0	1441	21.0
	서울이외 지역	5435	79.0	5435	79.0
취업자수	1인	1271	18.5	3453	53.7
	2인이상	5606	81.5	2979	46.3
가구원수	2인이하	691	10.0	691	10.0
	3-5인	5747	83.6	5747	83.6
	6인이상	438	6.4	438	6.4
분기	1/4분기	3505	51.0	3505	51.0
	2/4분기	3371	49.0	3371	49.0
배우자소득	유	1271	18.5	1271	18.5
	무	5606	81.5	5605	81.5
자녀수	1인	691	10.0	1549	25.1
	2인	5747	83.6	3794	61.5
	3인이상	438	6.4	831	13.5

IV. 연구결과

1. 10분위 계층별 평균 사교육비와 소비에 대한 평균 사교육비의 비율

평균 소비는 11% 감소한데 비하여 사교육비는 '97년 87,091원에서 '98년 73,357원으로 15.77% 감소하여 소비보다더 큰 감소율을 보였다. 10분위 계층별 사교육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 계층에서 줄어들었으며 '98년에는 3/10분위의 평균이 0의 값을 보여 저소득 계층의 빈곤화가 심화되어 교육투자의 여력이 전혀 없는 계층이 하위 1/3선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의 소비에 대한 비율은 9/10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줄어들었으나 10/10분위 계층만 0.38% 늘어나 계층간 사교육 투자격차가 심화 되어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3] 10분위 계층별 평균 사교육비와 평균 사교육비의 소비에 대한 비율

계층	소비(원)			사교육비(원)			사교육비의 소비에 대한 비율(%)		
	97	98	97-98	97	98	97-98	97	98	97-98
1	564155	492879	71276	0	0	0	0.00	0.00	0.00
2	804481	718119	86362	0	0	0	0.00	0.00	0.00
3	965297	863900	101397	95	0	95	0.01	0.00	0.01
4	1104451	992297	112154	9755	5231	4524	0.88	0.53	0.36
5	1232717	1122130	110587	29699	21189	8510	2.41	1.89	0.52
6	1387554	1262087	125467	55452	42965	12487	4.00	3.40	0.59
7	1574805	1425921	148884	87473	68951	18522	5.55	4.84	0.72
8	1817033	1635339	181694	127664	103374	24290	7.03	6.32	0.70
9	2185188	1957288	227900	185947	158384	27536	8.51	8.09	0.42
10	3673816	3158530	515286	376508	335754	40754	10.25	10.63	-0.38

2. 10분위 계층별 평균 사교육비의 누적점유율, 한계지출성향 및 탄력성

'97년 사교육비의 누적점유율은 하위계층에서 두드러지게 소비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8/10분위 이상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98년에는 9/10분위 이하의전 계층에서 소비보다 낮아서 소비보다 사교육비의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화 됨을 알 수 있다. 1/1분위 계층의 평균 사교육비는 '97년이나 '98년 모두 0원이나 타 계층이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였기 때문에 누적점유율은 높아졌으나 타계층은 모두 누적점유율이 낮아져 계층간 사교육 투자의 격차가 커져감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의 증가액수에 대한 사교육비의 증가액수의 비율인 사교육비 한계지출성향은 8/10분위 계층까지 높아지다가 9/10분위 계층부터 줄어들었다. 즉, 3/10분위 계층은 소비가 만원 늘거나 줄어든 때 사교육비를 9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10분위 계층은 1,337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사교육비의 탄력성은 소비가 1% 늘거나 줄어든 때 사교육비가 얼마나 늘거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0/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경제학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재로 간주하는데 사교육비는 10/10분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사치재적 성격을 보였으며 특히 3/10분위 계층은 무려 9.5가 넘는 값을 보여 사교육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3. 가계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 분산분석 결과

가계특성별 사교육비의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98년에 줄어들었으며 '97년과 '98년 모두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가계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97년에는 사무직과 기술직/준전문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9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무직의 실업율이 기술직/준전문직보다 큰 IMF 사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97년에는 농어업/기능직과 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9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직업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97년에는 고등학교 입학-졸업자 가구주 가계와 초대 및 전문대 입학-졸업 가구주 가계의 사교육비 차이가 유의했으나 '98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97년에는 가족수가 3인 이상 - 5인 미만인 가계와 5인이상인 가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98년에는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이 감소되는 불황기에 식구가 많은 가계에서 필수재 지출 후 사교육비로 할당할 자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4] 10분위 계층별 평균 소비와 사교육비의 누적점유율, 한계지출성향 및 탄력성

계층	소비 누적점유율(%)			사교육비 누적점유율(%)			사교육비한계 지출성향	사교육비 탄력성
	97	98	97-98	97	98	97-98		
1	3.69	3.62	0.07	2.28	2.47	-0.18	0	0
2	8.94	8.90	0.04	6.68	5.89	0.79	0	0
3	15.26	15.24	0.02	12.18	11.44	0.74	0.000937	9.519976
4	22.47	22.53	-0.06	19.14	18.02	1.12	0.040337	4.566958
5	30.53	30.00	0.53	27.56	25.42	2.14	0.076953	3.194089
6	39.60	40.03	-0.43	37.53	34.65	2.88	0.099524	2.490355
7	49.88	50.50	-0.62	48.57	46.38	2.19	0.124406	2.239714
8	61.76	62.50	-0.74	61.99	60.54	1.45	0.133686	1.902748
9	76.01	76.86	-0.85	77.02	75.91	1.11	0.120943	1.421287
10	1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79090	0.771729

[표 5] 가계 특성별 사교육비의 차이: 분산분석 결과 (n='97: 6876, '98: 6904)

변수	집단	1997년				1998년			
		평균 교육비	가구수	DMR	F값	평균 교육비	구수	DMR	F값
가구성별	남	92610	5807	A	72.55***	76230	6010	A	28.50***
	여	5711	1069	B		54041	894	B	
가구주직업	전문직	114354	1227	A	27.49***	90106	1425	A	17.26***
	기술직/준전문직	109220	771	A		84347	780	AB	
	사무직	84523	712	B		77986	732	B	
	서비스판매직	83139	1150	B		77144	1140	B	
	농어업/기능직	75861	2521	B		61096	2369	C	
	단순노무직	55112	495	C		49120	458	D	
가구주학력	대학원이상	164375	241	A	55.32***	137300	176	A	42.63***
	대학 입학-졸업	112250	1357	B		92414	1967	B	
	고등학교입학-졸업	85874	3042	C		72514	1502	C	
	초대 전문대입학-졸업	70822	469	D		64265	1803	CD	
	중졸이하	63643	1767	D		52011	1456	D	
가족수	5인 이상	104775	438	A	124.25***	100773	387	A	85.04***
	3인 이상 - 5인 미만	94152	5747	A		77318	5896	B	
	2인 이하	17174	691	B		18665	621	C	
배우자	취업	98149	1271	A	12.05**	80316	1077	A	4.58*
	무직	84584	5605	B		72071	5827	B	

98년 소비 * 0.05 ** p<0.01, *** P<0.0001

IMF 체제 이전과 이후의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 비교

변수	집단	1997년				1998년			
		평균교육비 (원)	가구수	추후검증	F값	평균교육비 (원)	가구수	추후검증	F값
분기	2/4분기	92993	3371	A	14.57***				
	1/4분기	81415	3505	B					
소비	1,807,349원 이상 (1,627,359원 이상)#	465612	1719	A	352.06***	137849	1726	A	348.88***
	1,303,770 이상 1,807,349원 미만 (1,187,607원 이상 1,627,359원 미만)#	95743	1719	B		80911	1726	B	
	967,602원 이상 1,303,770원 미만 (865,319원 이상 1,187,607원 미만)#	63472	1719	C		49358	1726	C	
	967,602원 미만 (865,318원 미만)#	32537	1719	D		25229	1726	D	
거주 지역	서울	118541	1441	A	115.34***	105266	1235	A	
	서울이외 지역	78753	5435	B		66406	5669	B	
자녀수	3명이상	147295	677	A	182.61***	106895	831	A	
	2명	112710	3457	B		88748	3794	B	
	1명	53654	1761	C		44730	1549	C	
취업자 수	2인이상	91827	2979	A	14.57***	79575	2734	A	7.53**
	1인	85342	3453	B		71473	3596	B	
가구주 연령	40세이상 - 50세미만	134311	2285	A	26.94***	1016523	2272	A	157.02***
	30세이상 - 40세미만	79872	2713	B		63819	2893	B	
	50세이 - 60세이하	61482	880	C		48694	825	C	
	30세이하	14301	658	D		15056	644	D	

4) 가계특성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인구통계적 변수의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자녀수, 소비, 취업자수, 가구주연령, 분기, 주거지역, 가구주성별, 가구주직업(전문직과 농어업), 배우자취업 유무였으며 사용된 모델의 설명력은 '97년 21.83%에서 '98년 14.18%로 줄어들었다. 자녀수가 1명 늘어날 때 사교육비는 '97년 45,697원 늘어났으나 '98년에는 35,052원 늘어났다. 소비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97년에는 소비가 10만원 늘 때 사교육

비가 3,148원 늘어났으나 '98년에는 394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즉, 경제력의 영향력이 거의 1/10으로 줄었다. 취업자수는 '97년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1,59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에는 8,707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많았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취업자수가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주로 저소득층의 주부들의 취업률이 높은 반면에 상위층의 주부취업률이 낮는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분기의 영향력은 '97년에는 유의하였으나 '98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97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가 서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월평균 36,504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에는 25,136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과소비 경향은 서울지역 거주자들이 주도하나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주도력이 약간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주 학력은 고학력자가 자녀가 없거나 어린 젊은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장노년층에는 고학력자가 적다. 이와 같이 학력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표본의 정규분포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들(문숙재·김성희, 1996; 양세정·이윤금, 1997)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사교육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두 해 모두 연령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97년에는 연령이 한 살 증가할 때 사교육비는 1,051원이 늘어났으나 '98년에는 2,368원이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과 동아일보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1998년 소득의 감소율은 20대 7.7%, 30대 3.5%, 40대 1.1%, 50대 1.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이렇듯 연령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커진 이유는 젊은층의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96년 같은 자료를 분석한 류정순·이순형(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사부담 공교육비를 포함한 광의의 사교육비는 여성가구주 가계가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성별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두 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가구주의 직업은 전문직에 비하여 기술직/준전문직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98년에는 농어업/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이 유의했다. 아노바 결과보다 유의한 영향력이 덜 나타난 것은 직업에 따른 소득 등 다른 변수의 상호작용을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가 취업하고 있는 가계가 비취업가계보다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보다는 회귀계수는 14,275원에서 13,896원으로 줄었으나 줄어든 정도는 다른 변수에 비하여 적었다.

[표 6] 각 인구통계적 변수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 회귀분석결과

변수	1997년		1998년	
	교육비	Std. Err.	교육비	Std. Err.
자녀수	45697***	1560.1398	35052***	1116.6975
소비	0.03138***	0.001415	0.003940***	0.0003316
취업자수	-11592***	2023.4513	-8706.5347***	1637.2659
가구주나이	1050.9840***	144.0576	2368.0182*	1131.7464
분기(1/4분기) 2/4분기	15581***	2693.3007	1961.3616	2064.9358
주거지역(서울) 서울이외지역	-36504***	3364.2022	-25136***	2683.1363
가구주직업(전문직)		*		
기술직/준전문직	-16789**	4457.6833	6585.5440	4085.9115
사무직	4492.4851	4605.7214	6972.0720	4161.5361
서비스.판매직	3930.7725	3863.8652	-2747.1692	3723.4233
농어업/기능직			-21259***	3200.0591
단순노무직			-28111***	4495.3290
배우자취업여부(취업) 비취업	-14275**	3814.0694	-13896**	3151.7511
가구주성별(남자) 여자	-5675.6819	3905.7447	10551	3186.5862
상수항	-34064		-41399	
F값	174.276		115.249	
R ² 값	0.2183		0.1418	
Adjusted-R ² 값	0.2171		0.1405	

* p<0.05, **p<0.01, ****p<0.0001

3. 정책적 함의

오늘날 현대사회는 혈연중심의 신분세습사회를 종식시키고 업적주의와 능력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대로 출발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유일한 사회이동 및 신분상승의 수단이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제도가 창출하는 가치의 배분을 위한 규칙과 그것을 준수하는 사회적 행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바른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의 바른 운영을 통하여 각 개별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가? 현행의 제도는 공교육이라는 최소한의 교육혜택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더 이상의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획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쟁적 기회는 결국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초등학교까지의 공교육으로 교육기회가 국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가계의 경제력으로 부담한다. 공교육의 부담 부분이 이렇듯 최소한도로 적기 때문에 위의 실증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교육비의 82%에 이르는 18조6천억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류정순이순형, 1988). 학부모들은 가계의 재력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껏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비의 계층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교육기회의 계층간의 격차의 심화를 뜻하고 어린이의 장래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을 뜻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자질이 낮아 지적 자극을 충분히 받아 능력을 개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므로 무상으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 위주 사회에서는 교육투자의 기대 이득은 명문대학의 입학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때마다 기득권층이나 우수한 학생 집단의 학부모들은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온갖 통로를 이용하여 자식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위나 사퇴 등의 극단적인 방법도 이용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조기 해외유학 등의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제도적 희생자들과 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은 힘없고 생업에 바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나 정책의 도입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통로도 없으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이나 공익단체의 활동 또한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줄망이 큰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직업,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연줄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며 연줄의 집단주의적 결속력은 상층으로 갈수록 강해진다(임희섭과 박길성, 1993, 182). 따라서 개인적 연줄은 계층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위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대학 특히 명문학교의 입학은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소득, 상위계층의 배우자 및 연줄 망의 확

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교육비 투자량이 적은 저소득층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98년의 1/10분위-3/10 계층과 10/10분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격차 335,754원은 단순한 교육비 투자량의 격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추가적인 사회관습적, 제도적 불이익이 더해진 격차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타고난 불평등은 그 자체로서 정의도 부정의도 아니며 이 같은 불평등을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곳에서 비로소 정의가 문제된다(롤스, 1990). 정의로운 사회란 자연적인 우연이나 사회적인 우연을, 누구나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원칙, 즉 정의의 원칙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롤스(1990)는 정의의 원칙으로 모든 이에게 동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제1원칙과 사회의 최소 수혜자 계층을 위시한 모든 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사회경제적 차등을 용납하는 제2원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의 차등은 '최소수혜자 계층을 위시한 모든 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즉, '용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가?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육은 공공재로 간주되어 대학교육까지 공교육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평등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에 격차가 더욱 커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있다. IMF사태 이후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상류층의 교육비 과소비가 많은 부분 자녀의 해외유학에 기인하는데 해외유학 비용이 더 커지고, 중산층의 붕괴현상과 더불어 계층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 투자의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은 교육을 통하여 어느 사회 어느 시기에나 발생하는 사회적 위화감과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교육과 교육제도를 통하여 해소시키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문제가 교육을 통하여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교육도 투자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고 심지어 교육은 이러한 결과를 합리화시켜 주게 된다(이상오, 1998).

특히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고 금융실명제, 종합금융소득세,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가 다 풀린 데다가 이자율 마저 높아 상류층의 혜택이 커진 상황 아래에서 실업자들의 시위가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 이 시기에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의 경쟁 지향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유대의 끈은 위협받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체제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지향의 학교교육 및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유효 수요의 결핍으로 교육기회의 박탈이 심한 하위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은 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사회복지사업이 인간존중과 인간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면, 교육 역시 교육수혜자들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잠재능력을 다 개발할 수 있으며 개발된 능력에 부합하는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계층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와 같이 교육제도는 어떻게 뜯어 고쳐도 사교육비 증가현상을 지속적으로 늘이는데 기여한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70-80년대의 부동산 투자에서 정보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득을 보도록 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의 교육투자 또한 재력과 지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에서 만약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수억자 부담의 경쟁 지향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심화현상을 방치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유대의 끈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와 교육과소비는 정부 주도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기회를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의 기본적인 틀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과 일치되어 왔는데, 공산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크기 때문에 시장분배로부터 분리되어 공공재로 취급되고 있다(김태성·성경룡, 1997). 또한 교육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인적자본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nison, 1974; Lampman, 1984). 또한 교육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해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램프만(1984)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과 건강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GNP의 약 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사교육을 공공 부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교육부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만은 돈과 시장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역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V. 결론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조사연구들은 조사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어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 자료의 표본이 가지는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도시 학부모 가계의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IMF 사태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었고, 이로 인하여 지출액의 격차는 줄었으나 소비에 대한 비율이 최상위계층인 10/10분위 계층에서 오히려 늘어나 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짐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하위계층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97년에는 2/10분위까지의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0이었으나 '98년에는 3/10분위까지 0의 값을 보여 하위 계층의 빈곤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할 여력이 없는 계층 또한 급격히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비의 누적점유율은 하위계층에서 두드러지게 소비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8/10분위 이상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98년에는 9/10분위 이하의전 계층에서 소비보다 낮아서 소비보다 사교육비의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화 됨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한계지출성향은 8/10분위 계층까지 높아지다가 9/10분위 계층부터 줄어들었다. 즉, 3/10분위 계층은 소비가 만원 늘거나 줄어든 때 사교육비를 9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10분위 계층은 1,337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사교육비의 탄력성은 10/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특히 3/10분위 계층은 무려 9.5가 넘는 값을 보여 사교육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고 상류층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계층별 지출의 격차가 심화 되어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 IMF 사태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었고, 이로 인하여 지출액의 격차는 줄었으나 소비에 대한 비율이 최상위계층인 10/10분위 계층에서 오히려 늘어나 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짐을 보여 주었다. 특히 하위계층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97년에는 2/10분위까지의 계층에서 사교육비가 0이었으나 '98년에는 3/10분위까지 0의 값을 보여 하위 계층의 빈곤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할 여력이 없는 계층 또한 급격히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비의 누적점유율은 하위계층에서 두드러지게 소비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으나 8/10분위 이상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98년에는 9/10분위 이하의전 계층에서 소비보다 낮아서 소비보다 사교육비의 불평등의 정도가 더 심화 됨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 한계지출성향은 8/10분위 계층까지 높아지다가 9/10분위 계층부터 줄어들었다. 즉, 3/10분위 계층은 소비가 만원 늘거나 줄어든 때 사교육비를 9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10분위 계층은 1,337원 늘이거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한 사교육비의 탄력성은 10/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특히 3/10분위 계층은 무려 9.5가 넘는 값을 보여 사교육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고 상류층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계층별 지출의 격차가 심화 되어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시 학부모 가계의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상위계층, 서울거주, 40대 연령층, 배우자 취업, 자녀수가 많고 취업자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교육비는 사치재의 성격을 보이며 사교육비 과소비는 상류층에서 주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투자는 선별지표인 입시 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지출되므로 학생의 창의력이나 잠재능력 개발을 제대로 사키지 못하여 투입된 사교육비에 비하여 산출된 인적 자원의 생산성이 낮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과다소비일 뿐만 아니라 과소 소비의 양상을 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정책으로 가장 강력히 소비절약 운동을 벌여야 할 부분이 바로 교육영역으로 판단된다.

교육비의 지출은 중국에는 교육기회에 대한 개방성과 평등성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올바른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의 바른 운영을 통하여 각 개별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교육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 재정적 여력이 있는 상류층 가계는 사교육비 지출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교육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경우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소외계층의 계층이동 기대를 좌절시키고 그러한 좌절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의 경쟁 지향 체제를 혁신하지 못하고 교육소비의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계층의 고정화가 이루어지고 계층간 이동이 교육통로를 통해서 폐쇄되어 저소득층의 계층상승 희망을 좌절시킬 것이다.

정책당국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구조와 교육과소비는 정부 주도 아래에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의 근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된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외부로 산출되는 효과도 장기간으로 나타나며 그 효과가 크기 때문

에, 일반 시장경제에서 분리하여 공공재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정책과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이러한 사교육비 투자의 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만은 금전과 시장경제 법칙으로 관장하지 않는 공공영역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개혁, 재정개혁 및 누진세율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하고 가계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부담하는 20조원 가까운 사교육비를 세금으로 걷어서 우리자녀의 교육비 즉, 공교육비로 할당한다면, 낭비적인 경쟁을 위해 사용되는 사교육비가 진정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위하여 교육시설을 세우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공공 부문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교육부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복지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해 주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인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사회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원(1990).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길사.
- 공은배, 백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주(1985). 교육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열(1984). 대학진학기회의 소득계층별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희, 문숙재(1996).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김신일(1981). 교육불평등. 김영모(편), 현대사회문제론(pp. 108-124).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모(1973).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진단학보, 35, .
- 김영용, 전용덕(1993). 대학 가려고 발버둥치는데. 자유와 시장(pp. 223-272). 서울: 태진출판사.
- 김은정(1995).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일희(1980). 중등학교 사교육비와 선정된 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1995).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 실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정순(1996),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류정순이순형(1988), 한국 도시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계층간 불평등: 정책적 함의, 사

회 정책학회 기고중

- 류정순, 이희자(1995). 도시근로자 가계의 계층별 교육비 비교(1979년에서 1993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제4권 1호, 63-74
- 박정수(1996).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 연구, 5(2), .
- 석태종(1987). 교육기회와 사회계층과의 관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애(1992). 고교생의 과외실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92-11, 현대사회연구소.
-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오석진(1998). 고교생의 과외실태 분석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팔무(1981). 세대간의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형선(1998).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일 외(1997). 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규환(1985). 빈민층 아동의 교육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개발과 교육의 민주화(pp. 19-15). 서울: 한울. 19-50.
- 이주현(1981). 교육기회균등 사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영(1997). 학력주의와 학력경쟁. 고영복(편), 현대사회문제(pp. 547-583). 사회문화연구소.
- 임선희(1984). 근로계층의 학교기회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정빈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임희섭(1983). 사회개발과 교육기회. 사회적 평등과 발전(pp. 82-168), 서울: 정음사.
- 장진화(1992). 고등학교 진학결과로 살펴본 교육기회의 불평등. 경북대학교.
- 정영숙(1992).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3(2), 1-14.
- (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연구, 7(1), 1-13.
- 정우현(1991). 교육사회학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선일보(1997년 112월 14일자).
- 주영량(1992).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경향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경수(1973). 한국에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한국교육학회 발표논문집.
- 차재명(1981). 고교평준화정책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미친 영향: Lorentz곡선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논문.

- 차윤경(정?)(1983). 고등교육기회의 획득의 결정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승애(1985). 도시 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 1997 한국의 교육지표, 통계청
- 통계청(1998), 1998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1998).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Becker, G.(1964). *Human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lau, P. & Duncan, O.(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John Wiley & Sons, Inc.
- Cain(Cane), G. G.(1976). The challenge of segmented labour market theories to orthodox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 1215-1257.
- Coleman, J.,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 Espenshade, T. G.(1984). *Investing in children*. The Urban Institute Press, Washington, D.C.
- Friedman, Milto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Flanagan, R. J.(1974). Labor force experience, job turnover, and racial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 Giroux, H.(1983). Theories of reproduction and resistance in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A critical analysi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3), 257-293
- Havighurst, R. J.(1961).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four societies*. in A. H. Halsey, Floud, J., and Anderson, C. A., (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Y.:The Free Press.
- Jencks, C.,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Y.: Harper & Row.
- Karabel, J. & Halsey, A. H.(1977).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incer, J.(1962).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50-79.
- Parsons, T.(1959). The school class as a social system: Some of its functions in American

socie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29(4).

Reich, M., Gordon, D. M., & Edwards, R. C.(1973).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3, 359-365.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1-17.

Sewell, W. H., et al.(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